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미비 지역 '한국판 뉴딜' 우선 추진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4) 국가 공공서비스 격차 시정

호남 소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반시설이 '호남선'이다.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주축인 호남선의 낙후가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전라선, 경전선 등도 정부의 투자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됐다. 경부선(서울-부산)이 개통한 것은 1905년으로, 호남선(1914년)보다 9년 이른 시점이다. 국토 서부권의 한축인 호남선은 동부권의 한축인 경부선보다 64년이 늦은 2003년에야 복선화가 이뤄졌고, 고속철도 역시 11년 늦게 개통됐다. 이는 호남선의 일부인 1단계(충북 오송-광주송정)를 말한 것으로, 2단계(광주송정-목포)까지 하면 경부선보다 21년이 늦은 2025년에 가서야 준공될 예정이다. 정부

선의 종착역인 부산은 1조3000억원을 들여 도시 내 구간 16.5km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는 여전히 고속철도가 계속도로 다닐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격차의 시정은커녕 더 확대됐다는 의미다.

전남도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준공을 2-3년 더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호남의 기반시설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경제성'이었다. 호남고속철 역시 사업 초기 비용편익분석(B/C)이 0.39에 불과해 난항을 겪었다. 1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0.8이 공공시설물의 건설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아예 사업 대상으로조차 거론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경제성과 효율성만 중시하는 비용편익분석은 지금까지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국토불균형발전을 초래하면서 호남권을 중심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하 예타) 개편방

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예타 평가항목을 개편하고, 지역균형 발전 평가 시 지역낙후도를 가감 점제에서 '가점제'로 바꾸는 등 변화를 줬지만 이 역시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다. 수도권·비수도권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을 반영해야 하며, 지역낙후에 대한 보다 높은 가점을 줘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예타 개편안 미흡 비수도권내 지역 불균형 반영 지역낙후 높은 가점 차별화 해야

또 지금까지 예타에서 탈락한 지역숙원 사업 23개(사업비 24조1000억원)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줬지만, 이 역시 이미 상당한 발전기반을 갖춘 영남권, 충청권에도 더 큰 혜택을 줬다는 불만소리가 나왔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에 남북내륙철도(사업비 4조 7000억원), 충북선 철도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등이 포함됐다.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호남권의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1조 7000억원)이 예타 재조사를 거쳐 간신히 통과한 정도였다. 정부의 예타면제에도 호남권이 얻은 혜택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다지 차별적이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국 시도의회의 의장들이 예타가 인구가 적은 지방에 불리해 지역 숙원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386조

원 규모의 849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실시돼 35.3%인 300개 사업은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만이 아니라 영남권, 충청권 등 타 지역에 비해 인구구조,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등이 열악한 광주·전남 등 호남권이 명실상부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광주·전남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전선 전철화사업 및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조기 완공만이 아니라, 남해안철도 전철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지난 2019년 정부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전남의 수산식품수출단지,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 화태-백야연도교) 등에 대해 타 지역보다 신속하게 국비를 투입해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광주-대구발발내륙철도, 서해안(군산-목포) 철도,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흑산공항 건설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동훈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과거 정부 주도의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효과는 미미하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 추진, 지자체의 자발적인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의 미흡,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행정성 상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정책 등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 그 초점을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기반시설 집적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의 생활 기반시설(SOC) 유형별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노인여가시설, 응급의료시설, 공영문화시설, 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시설의 도·농간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과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신 책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평동 3차산업 기업 투자 몰려든다

투자협약기업 3개사 입주 완료
20개사 실무자 600명 고용창출
친환경 공기산업 핵심 거점
지역경제 활성화 청신호

코로나19로 대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광주평동3차 산업단지 기업투자가 대거 몰려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평동3차 산업단지에 투자MOU를 체결한 20개 기업의 실무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기업인 아름다운동행(주), (주)그린코리아, 김치산업기업인 (주)레전입주를 완료했고, 해외유턴기업인 대영전자(주)를 비롯한 7개 기업이 공장을 짓고 있다. 또 공기산업기업 (주)조인트리 등 10개 기업은 공장부지 매입을 마치고 공장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평동3차 산업단지에 공장을 완공하면 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500억원이 투자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동3차 산업단지에는 2027년까지 총 5000억원이 투입돼 친환경공기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며, 올해 공기산업기업 7곳



침수피해 마을 복구 일손돕기

이용섭 광주시장이 11일 오후 수해현장인 광산구 신덕마을을 방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침수피해를 입은 가재도구와 폐기물들을 치우고 있다. /광주시 제공

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3개 기업은 이미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공기산업 기업의 투자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해 온 결과물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민선 7기들어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기업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착공,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광주

시의 변화된 투자환경도 기업 유치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31개 기업과 1181억원 투자, 798명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는 실적을 냈다.

주재희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코로나 19발 세계 경제 위기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는 광주시 투자환경의 경쟁력을 확신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3대 방향인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강화'에 맞춰 광주형 뉴딜을 효과적으로 이끌 인공지능(AI), 공기산업,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분야 우수기업을 발굴해 유치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외국인주민협의회 출범

결혼이민자 등 19명 위원 위촉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외국인주민협의회가 첫 출범했다.

1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네팔, 베트남, 인도, 중국, 필리핀,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태국 출신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렸다. 협의회는 외국인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 관련 시책 제안·전달, 코로나 19 방역 정보 전파 등을 위해 구성했다.

한국어가 가능하고 한국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인 결혼 이민자 가운데 일정 기간 한국과 광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학,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1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 대학 교수, 유학생, 가정주부 등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과 불편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대표 후보 4명 부적격, 재공모

28일까지 접수...10월 임명

광주시가 오는 14일부터 문화재단 대표 이사를 재공모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서류심사 합격자 4명을 면접 심사하고 '적격자 없음'의 결했다.

임원추천위는 면접을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 시장에게 추천한다. 시장이 내정한 1명은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

명된다.

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다음 달 3일 서류 심사, 10일 면접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10월 중 임명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임기는 3년으로 현 대표이사 임기는 오는 9월 13일 만료된다. 대표이사 선정이 지연되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